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계정에 맞는 사업을 편성했고, 다른 예산과 같이 국회 심의를 거쳐 운용됩니다.

< 보도내용 >

- 2026.10.7.(수) 문화일보, 「장관 관사 짓는게 미래대응?… 성장자금 162조 ‘쌈짓돈’ 현실화», 「공기관 인센티브·학교 냉방비로… 줄줄 새는 미래기금」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최소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내년도 지출 예산안에 ‘선심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으며,
 - “현금 지원 사업 확대나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140개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하는 ‘물량공세’에 국회 감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청년문화예술패스,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 등 지방·청년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행정부처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능개혁 지원사업,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 비수도권 관광호텔 건립 지원 등 돌려막는 듯한 모습이 발견되고, 한국전력은 미래대응기금 최대 수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 정부입장 >

- 미래대응기금에는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서 인적·물적 자본형성, 과감한 투자 등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과, 기금 재원이 국민적 노력으로 발생한 추가세수인 만큼 성장의 과실 확산에 기여하는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 ^N자본축적(New-Capital), ^E과감한 투자(Enterprising), ^X탄력적 집행(fleXible), ^T시급성(Timely)

- 또한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회계·기금과 같은 절차로 국회 심사를 받는 만큼, 국회 감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에 지적된 사업들의 미래대응기금에 반영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반도체 등 산업 성장의 과실을 모든 지역·계층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경제격차 완화, 인구소멸지역의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지역주도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사업의 취지가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 아울러, 금년 시범사업 시행 전후로 대상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사업 시행 전후 비교 시, 평균 인구증가율은 +5%, 신규가맹점 +16.5% 확대

❷ (청년문화예술패스) 모든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와 예술인의 새로운 창작·공연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산업의 선순환*을 위해 19~20세, 생애 1회 지원에서 청년 전체, 매년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특히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전시·도서·영화에서 체육 분야까지 확대하여, 집행률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패스 사용 시 추가 결제액이 지원금의 41.1% 수준(문화예술위, '25년 패스사용 분석)

❸ (행정부처 지방이전)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부처 지방이전은 핵심적인 국가균형성장 정책입니다. 다만, 이전 과정에서 이전 공무원들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서 과거 중앙부처 이전사례 등을 감안하여 이주지원비 및 장·차관 관사 임차료 등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 장·차관 관사 임차료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라 장·차관의 세종 근무에 필요한 관사를 임차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사 신축 예산이 아님

❹ (공공기관 기능개혁)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분산된 기능을 재편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구조개혁으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개혁 과제에 해당합니다. 내년도 예산안(1,000억원)은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수당 등 제도·처우의 차이를 조정하여 기능개혁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한시적 전환지원 재원입니다.

- ⑤ (지방대도시 호텔건립) 외래관광객 3천만 명 시대에 대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에 5성급 호텔 3개소를 신축하기 위한 융자·이자보전을 공모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수익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방에 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⑥ (전국민 AI서비스 보편 활용) 모두의 AI는 국내 AI 모델을 기반으로 챗봇, 공공 AI 에이전트 등 대국민 AI 서비스를 무제한·무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두의 AI를 통해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쉽게 쓰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AI 서비스의 이용자를 확보하여 국내 AI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⑦ (전력계통 지중화 지원사업) 고압 송전시설 구축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국가기간송전망의 신속 구축을 위해 고압 송전시설을 지중화하는 경우, 수익 회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불확실하여 투자 유인이 부족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 한전의 수익 증가와 무관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 비용이므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⑧ (전기요금 특례) 초중고 학교 냉난방 및 미곡·천일염 등 FTA 농가 등에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수혜자 지원 축소 우려를 해소하고, 전기요금 할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 ⑨ (국부펀드 출자) 국부펀드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지분투자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만큼 투자 이후 수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며, 수익성 외에도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잠재성장률 확충 등 공공성과 투자자산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출범 초기 범정부 투자전략 수립, 투자과제 발굴 및 관계부처 간 정책조정 등 국부펀드의 안정적 제도 안착을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담당 부서	예산실 예산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김정애 (044-214-2330) 하치승 (hcs017@korea.kr)
	기금운용혁신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건민 (044-214-2370) 박준영 (zudbro@korea.kr)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의영 (044-214-2570) 김기문 (krrard419@korea.kr)
	문화체육관광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박성주 (044-214-2550) 옥지연 (jy0908@korea.kr)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박환조 (044-214-2810) 고광민 (sniper1019@korea.kr)
	농림해양예산과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행정외교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주무관	박진호 (044-214-3130) 김동혁 (kdh311@korea.kr)